자치역량 강화 …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시대 연다

정부 지방분권 로드맵 초안

권한이양·재정분권·자치역량 제고·주민자치 강화·지방행정체계 구축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추진 …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명시

향후 5년간의 지방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밑그림이 공개됐다.

그동안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행정적 권한이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자치분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6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방분권 로드맵' 초안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목표를 달성해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고스란히 담겼다.

행안부는 이를 위한 5대 핵심전략으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하게 될 개헌 때 지방분권 국가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주요 권한 포괄적 지방 이양**=중앙정부의 치안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광역단위별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지역경제와 정주여건 등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주요 권한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을 로드맵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행·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방교육의 창의성·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교육부의 유아·초중등 교육 권한 일부를 시·도교육청과 각 단위 학교에 이양하기로 했다.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정부는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을 거쳐 단계적으로 6대4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 추진과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된다. 특히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증가하는 세수 일부를 자치단체 간 균형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 개편해 많은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업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치역량 강화**=지방분권 시대에 한 축을 맡게 될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의장의 인사권 확대,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비례대표 의석 확대, 입법정책 전문인력 지원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정원관리 자율화, 자치단체 유형별 맞춤형 조직 재설계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풀뿌리 주민자치' 대폭 강화**=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주민소환제 청구요건을 지역별 인구규모, 정치참여 수준(투표율) 등을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주민소환제의 개표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민자치회 등 주민 대표기구가 직접 마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 협의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와 지방경찰청·검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협업체계도 제도화해 기관 간 갈등으로 초래되는 행정상 비효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간 자율적인 행정구역 통합·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혁신적 갈등 관리' 차원에서 지자체에 '공공갈등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내년 개헌 때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시·도지사 간담회, 자치분권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중앙-지방 간 소통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헌법 내에서 가능한 지방분권 로드맵 추진과제는 오는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완료하고, 주민투표제나 포괄적인 사무이양 등 법률개정이 수반되는 과제는 내년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제2국무회의 신설,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단체 사무범위 확대 등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 개헌 논의 때 의견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일반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방자치 박람회 '광주 시민총회'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막한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에서 광주시의 시민총회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제2 국무회의' 무슨 말 오갔나

행안부장관 등 중앙정부 관계자·전국 17개 시도지사 모두 참석

풀뿌리 민주주의과 지방분권국가 선언식도 가져

광주시 공원 조성비 국비지원·전남도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 등 요구

문대통령 "광주는 광주형 일자리와 직접민주주의 앞서가는 도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여수에서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을 열고 지방자치분권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제2국무회의' 격인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등 중앙부처 관계자를 비롯,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김부겸 장관이 정부가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과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 등의 안건을 보고한 데 이어 시·도지사 간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학계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공유하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한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어 문 대통령과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하는 선언식을 가졌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광주시는 공원 일몰제에 따른 광역지자체의 대형공원 조성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줄 것과 아시아문화중심도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의 지원을 청와대에 요청했다. 군공항 이전, 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광주~대구 동서 내륙철도 건설,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국책기관 설립 등의 현안사업 지원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전남도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국제공항 경유,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 지원 등 지역 현안 4건에 대한 지원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섬 지역 발전을 위해 '섬의 날'을 제정하고 연륙 후 10년경과 10인 미만 섬을 개발하는 근거가 될 도서개발촉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순신대교는 세수는 대부분 국세로 징수되지만, 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실을 고려해 국도 승격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순신대교 관리를 위해 전남도, 여수시, 광양시는 올해 42억원, 내년 35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려면 고속철도와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무안공항 경유 노선을 조속히 확정하고 2020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세계박람회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선투자금 상환을 면제해 주고 '일몰제'에 따라 올해까지만 지원되는 박람회 재단 운영 예산을 내년에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장에서 광주시 정책홍보관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봄 광주에서 열리는 직접 참여민주주의의 한 모델인 광주시민총회에 참석할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광주는 광주형 일자리에서도 그렇듯 직접민주주의에서도 앞서가는 도시"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광주형 민주주의로 촛불 민주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에 대해서도 "역시, 광주다"라며 공감의 뜻을 표시했다. 이어 내년 봄 광주시민총회에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묻는 직접 현장투표에서 문 대통령은 '참석' 팻말을 들어 박수를 받았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